

다산포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전 세계에는 자국민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적 연기금이 있다. 이는 사회 보장 제도의 근간 중 하나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공적 연금(OASDI),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일본의 전 국민 기초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공적 연기금이 제도화된 이래 막대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이면서 사회 보장 제도는 필연적으로 금융의 영역, 특히 자본 시장과 자본 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각종 금융 기관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동시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이 거대 공적 연기금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용에 없어서는 안 될 원리로 들어온다.

적립금을 특수한 국제에만 투자해 운용하는 미국의 공적 연기금을 제외하면 전 세계 주요 공적 연기금이 상당 정도

공적 연기금과 대체 투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대어 다변화 투자(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를 해 오고 있다. 적립금 규모가 워낙 막대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 연기금이 자본·금융 시장에서 최대 큰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NPS),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은 전 세계 5위 내에 들 정도이다.

주식·채권 이외 자산에 투자

하지만 2000년대 초 이래,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주식·채권 등 전통적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새로운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체 투자 붐(열풍)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private equity) 펀드, 헤지펀드 등 주식, 채권 이외의 자산을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흥미롭게도 공적 연기금이 대체 투자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투자 자산은 전통적 자

산에 비해 어떤 차별적 특징을 갖는 것일까? 우선 대체 투자 자산은 정형화된 공개 시장을 통하지 않고 비공개 협상을 통해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거래된다.

둘째, 이에 따라 대체 투자 자산의 가격 내지 시세 형성 방법이 주식과 채권 등의 전통적 자산의 그것과 크게 다른 모습을 띤다. 즉 전통적 투자 자산의 경우 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자산 시장 내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확정되는 데 비해, 대체 투자 자산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세 확정을 위해서는 공정 가치 평가 프로세스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끝으로 수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대체 투자의 기초 자산이 아주 다양한데다가 대체 투자의 수익 창출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의 운용에 비해 상당한 거래 비용이 지출된다.

한국의 국민연금(NPS)은 비교적 일찍 국내외 대체 투자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대체 투자에 대한 일정한 학습을 거친 뒤, 해외 사모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 대체 투자에 나섰다. 대체 투자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비중과 중요

성을 키워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 자산 시장이 협소하고 포화 상태인 데다가 대체 투자 자산이 주식·채권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대 중반까지 해외 대체 투자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실현하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왔다.

지난해부터 수익률 낮아져

하지만 2017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달리 다소 우려스럽게도 해외 대체 투자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해외 대체 시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 공적 연기금 및 앵글로 아메리칸 국가들의 공무원 연금 등이 대거 대체 투자 시장에 몰리면서 예전처럼 좋은 투자 대상을 손쉽게 획득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차제에 해외 대체 투자를 포함하여 대체 투자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GO칼럼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

필자는 지난해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주관하는 시민사회단체 정책 연구 참가자로 선발되어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다. 연구 주제는 국가 정책 결정에서 공론화 과정과 방법 및 모범 사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모두 7곳의 기관을 방문했는데, 그중에서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를 처음 창안한 미국 미네소타주 제퍼슨 센터(Jefferson Center)와 대규모 환경 관련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캐나다 퀘벡주 정부 기구인 BAPE(Bureau d'Audience Publique sur L'

'environnement)가 인상적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모두 특정한 공공 정책과 사업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기관들이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고 신고리 원전

독립적인 지역 갈등 해결 기구가 필요하다

5·6호기 공론화를 실시했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험이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 제공, 집단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창출함으로써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는 해묵은 현안들이 많다. 도시 철도 2호선 건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군공항 이전,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도시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 현재 갈등을 빚고 있거나 잠재적인 갈등 사안들이다. 광주시가 일반적으로 밀어붙여 시행하거나 무작정 대안 없이 지켜만 보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광주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며칠 후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새로 광주 살림을 책임지는 민선 7기 광주시장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묵은 지역 현안들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갈등 해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시민 참여와 관 주도의 일방적 홍보만으로는 더 이상 '뜨거운 감자'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다. 촛불 집회 시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을 참여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민관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 가야 하는 시대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벌써 지역 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중립적인 제3의 갈등 전문 기관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나리오 워크숍과 타운홀 미팅,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

민 참여단을 선정, 숙의 과정을 통해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시 우리를 보자.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 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공론화를 거쳤다면 어땠을까?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원 특례 사업을 대전처럼 공론화를 할 수는 없었을까? 그랬다면 당장 시행은 늦어지고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팠겠지만, 확인하건대 지역 사회 갈등은 최소화되고 공정성이 확보되어 시민들은 그 결정을 수용하고 광주시는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민선 7기 새로운 시장은 지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해 결정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가칭)광주공공정책결정위원회(GPPRC, Gwangju Public Policy Resolution Commission)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안별로 광주형 공론화를 시행해 시민의 뜻과 힘을 모으고, 광주 민주주의의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줬으면 좋겠다.

기고



김윤식  
광주해계유니버시티드 조직위 사무총장

지난해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에 국정목표를 두고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경제 정책 패러다임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과학 기술 발전을 이끄는 4차 산업 혁명 선도과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대변되는 에너지 혁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써 에너지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중기와 전기,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1·2·3차 산업 혁명의 진전에는 에너지 혁명을 수반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대변되는 에너지 혁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써 에너지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새 정부는 지난해 지역 공약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 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 조성 및 한전 공대 설립 등을 통해 광주·전남을 미래 신산업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빛과 생명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에너지 밸리의 성공은 한전 공대에 달려있다

우리 지역에 한전 공대 설립을 포함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지역 지자체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역 산업 구조 개선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밸리는 미국 실리콘 밸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워털루 등과 같이 생산, R&D, 금융, 인력 등이 함께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의 실리콘 밸리와 정부 주도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는 스탠포드, 버클리 등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을 포함한 9000여 개의 기업이 운집해 있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미국 내에서 최고의 인재가 몰려 있고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한 대학,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이 있다.

이에 반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니스 소피아 앙티 대학을 설립해 우수 인재를 공급

하는 한편, 공공기관인 팀(Team) 코트 다쥐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해 1300개 기업에 3만 명이 일하는 성공적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하지만 어느 형태이든 성공한 산업 클러스터는 연구 개발(R&D), 기업, 금융, 인재 등이 결합돼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산업 클러스터를 성장시켜 나갈 혁신적인 R&D와 우수한 인재가 있다.

산업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에너지 밸리는 단지 몇 개의 한전 협력 업체 유치만으로 성장시키나갈 수는 없다. 성공한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보듯 우수한 인재 육성과 유치 그리고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R&D기반 조성으로 혁신적인 기업 활동이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대학이 있어야 한다. 실리콘 밸리의 기업 중 1200여 개 정도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 교수, 연구원들에 의해 설립되고, 실리콘 밸리 제품의 50% 이상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 동문 기업들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산업 클러스터에서 대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전에서 올해 4월 '한전 공대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글로벌 컨설팅 용

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에 필자가 바라는 에너지 밸리 성공을 위한 한전 공대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은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R&D), 기업, 금융, 인재 등이 결합돼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산업 클러스터를 성장시켜 나갈 혁신적인 R&D와 우수한 인재가 있다.

둘째, 지방 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수, 연구진, 학생 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 문화 시설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는 학부를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 R&D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대학의 지적·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전은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연관기업 500개사 유치와 3만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에너지 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다.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중 인용한 "stay hungry, stay foolish(늘 갈망하고 바보짓도 서슴지 말기)"처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우직하게 접근해야 한다.

社說

되살아나는 영산강...죽산보 등 상시 개방을

영산강 등 4대강 보(湫)가 개방된 지 1년이 지났다. 영산강 수질과 환경은 그 사이 어떻게 변했을까. 환경단체들의 관찰 결과 보 개방 이후 녹조가 없어지고 물길을 회복하는 등 본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의 수문을 개방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보 확대 개방 계획에 따라 승촌보까지 열렸다.

이후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 수문 개방으로 강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생태계가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2월 영산강 상류에서 관찰된 생물은 35종, 3106개체였는데 지난해 12월엔 43종, 8628개체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류에서 관찰된 조류 개체 수도 1489개에서 2884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유속(流速)이 보 건설 이전 보다 느려지는 등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죽산보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인 2010년 0.973%에서 올해는 0.030%로 급감했다. 보 구조물이 물의 흐름을 막아 퇴적물이 쌓이고 수생 생물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완전 개방이 아니라서 녹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궁극적으로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도 수질과 용수 이용 등에 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와 대책을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보 개방으로 영산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최종 관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시 개방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만 없앤다고 수질과 환경이 완전 회복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강 분류와 관찰된 조류 개체 수도 1489개에서 2884개로 증가했다.

예식장 주변 교통지옥 해소 대책 마련해야

광주에서 주말에 차를 가지고 예식장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하객이 아니라더라도 예식장 근처 도로를 지난 이라면 뒤엉킨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에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다.

지난주 토요일 정오 무렵 본보 기자가 둘러본 광주시 북구 문흥동 C예식장 인근 도로도 그랬다. 이곳은 광주C, 문흥IC, 제2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이날 역시 예식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일반 통행 차량들이 뒤엉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었다.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하객 차량이 엉켰다. 예식장 주변 도로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같은 교통 대란은 예식장이 밀집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과 상무지구 등에서도 매주 주말이나 휴일이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주차난과 교통난은 법의 맹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 예식장은 5000㎡ 기준으로 50대의 주차 시설만 갖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예식장업을 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조례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주차 시설을 확보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의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예식장 주변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개인사업자인 예식장 업주의 주차난 해소를 돕는 옷치 못 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식장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조례를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예식장 신설·이전·증축에 나설 경우 교통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처음으로 카메라를 잡았던 때는 아마도 1970년대 말쯤이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였던가. 수학여행을 가기 전 동네 사진관에서 카메라를 하나 빌렸다. 기종은 '올림퍼스 펜'(PEN) 이었을 것이다. 하프사이즈 판을 사용하는 자동차 메러다. '할반'(Half) 사이즈로 찍기 때문에 24컷 필름으로 모두 48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

필름 소모량이 많은 신문사 사진 기자들은 완제품으로 나온 24컷이나 36컷 필름보다 롤 필름을 주로 사용했다. 작은 알루미늄 강통에 담겨 있는 코닥 Tri-X 흑백 필름을

(Daguerreotype)이 발명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유리판에 감광제를 입혀 사용했다.

1856년 발명된 셀룰로이드(Celluloid)는 유리판 대신 투명한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새 길을 열었다. 특히 1888년 미국 조지 이스트먼은 휴대용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 판매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한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과학 기술의 종합이었다.

필름 카메라의 퇴장

일본 카메라 메이커인 캐논사가 5월 30일 '필름 카메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필름 카메라의 생산은 이미 2010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후지필름 역시 오는 10월에 흑백 필름 판매를 종료한다.

우마차기 사라지고 자동차 세상이 되었는데 과학기술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필름카메라 시절에는 한 컷을 찍더라도 좀 더 생각하고, 현상이나 인화될 때까지 살펴머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손에 든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활용하는 디지털 세상. 이제 필름이 주는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다시 맛보기 힘들 듯싶다. /송기욱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우16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문 화 미디어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2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서 울 지 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